

폴란드, 경제위기 방지를 위한 정책 발표

□ 폴란드 정부, 새로운 경제정책 발표

- 지난 7월 23일 폴란드 정부는 정략적 의도가 읽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음. 이번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것임.
- 신임 Kolodko 재무장관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정책은 다음의 3가지 처방을 통해 문제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① 문제기업들이 국가에 지고 있는 각종 조세, 공과금 등의 연체채무를 탕감하고, 그 대신 해당 기업들로부터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 구조조정을 활성화함.
 - ② 금융기관들의 부실여신 상각 및 신규여신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문제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킴.
 - ③ 17%에 달한 고실업 완화를 위해 고용창출이 가능한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

□ 재정부담 커질 가능성 있음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폴란드 재

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해 Ozog 재무차관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으며, 대상기업 선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 한편, Balcerowicz 중앙은행 총재는 이 정책의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가를 유보하였으나, 정부에 대해 재정적자 감축만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Kolodko의 이중적 태도

- 한편, 이번 정책 발표 전인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Kolodko가 재정긴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금융시장 동요가 진정되었음.
 - * 전임 Belka 장관 사임 후 유로화에 대해 약 6%나 하락했던 즐로티貨는 이 회견 후 약 2% 상승하였음.
- 그러나 Kolodko의 회견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선, 폴란드의 정책방향을 우려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EU 등 국제사회와 개혁성향의 Kwasniewski 대통령, Piechota 경제장관 등 국내인사들에게는 개혁 및 긴축정책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집권 연정 각료들, 기업계, 노조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채무감면과 조세 혜택을 통해 실업억제 및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암시하였음.
- Kolodko는 재정적자 확대 억제와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 등의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 기대와 달리 Kolodko는 급격한 재정지출 억제보다는 세수(稅收)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한편,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는 대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즐로티의 약세 유도를 주문할 것으로 보임.

□ 폴란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우세한 듯

- 재무장관의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의 핵심은 폴란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으며,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Kolodko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주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도 Kolodko의 임명 직후 재정긴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폴란드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S&P : BBB+, Moody's : Baa1, Fitch : BBB+

- 한편, Gronkiewicz-Waltz EBRD 부총재는 Kolodko의 정책은 폴란드의 EU 가입추진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한편, 총체적 경제위기 가능성도 높일 것이라고 Kolodko에 대해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 1992~2000년 중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로 재임하면서 Kolodko와는 심한 정책 갈등을 겪었던 Gronkiewicz-Waltz는 Kolodko가 주장하는 통화위원회제도와 재정지출 확대는 바로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위기 원인이라고 질타하였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